

한·일 이해 증진을 위한 청소년 교육방안

최 인 화*

- I. 문제제기
- II. 한·일 양국의 부정적 상호인식과 그 원인
- III. 한·일 양국의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적 과제
- IV. 한·일 양국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교육적 대응
- V. 결론 및 제언

I. 문제제기

한국인들에게 있어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로 인식되면서 경계와 배척의 대상이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 지척의 거리에 있으면서도 불행했던 과거사로 인해 심리적 거리감은 대단하여 양국민은 서로를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일쑤이고 한·일간의 현안문제나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를 진지하게 논하여 본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된 연유에는 일방적 피해 당사자로서 한국이 멀리 임진왜란에서부터 가까이는 20세기 초 35년간의 잔혹한 식민통치에 이르기까지 일본으로부터 받

은 역사적 상처가 너무도 강렬하게 각인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최현섭, 1992, 77).

일찍이 한민족에 의해 한자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물과 기술을 배워가기 급급했던 일본이 무기를 앞세워 오히려 한반도를 유린했던 기억들은 오늘날에 와서도 선뜻 한·일간의 진정한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심리적 저항선을 치고 있다.

그러나 역사의 가르침은 뒤만 돌아 보고 앞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며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슬기로운 미래를 개척하기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이제 21세기를 불과 4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는 지나간 한·일간의 암울했던 역사적 상처를 서로 치유하고 세계화의 도도한 물결에 동참해 나가는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일본은 전쟁의 잣더미를 딛고 일어나 세계 무대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 여세를 몰아 정치·군사적인 면에서도 강국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경제대국에 걸맞는 새로운 국제적 위

* 대전과학고교, 교육학박사

상을 정치·군사대국 Super State으로의 형성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배성동, 1991, 129-130).

이러한 일본의 도약적 발전과 성장에 대해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을 경험했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한결같이 우려의 시선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이 진정으로 한·일간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구하고자 한다면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앞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진실되게 천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한·일간에는 최근 급변하는 북한 경수로 지원에 대한 한방도에너지 개발기구(KEDO)의 활동에서 처럼 국제정세속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할 분야가 많다. 이는 최근 확정된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에서 처럼 이제 시기적으로 확정되어 곧 다가서는 세계적인 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한·일 양국은 장기적인 견지에서 세계시민을 양성해 나가야 하는 교육 사업을 진지하게 탐색하고 그 실천을 위한 결의와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다.

사회과를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볼때 오늘의 한국 학생들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나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간의 관계유지나 세계평화의 실현,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를 몇년 앞두고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지닌 부정적인 일본관을 새롭게 고쳐주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전설해 나갈 실천역량을 개발시키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의 “시드니 선언”(1994년 11월)에 이어 국정 전분야에 걸쳐 세계

화추진 전략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현재의 하시모토(橋本龍太郎) 총리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작업과 정치 및 군사대국으로서의 일본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21세기의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주도해 나갈 동반자로서 청소년들에게 한·일간의 이해증진과 협력관계 유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현재의 한·일간의 상대국가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현상을 진단하여 보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적 교류협력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한·일 양국의 부정적 상호인식과 그 원인

1995년은 1894년 청일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난지 100년이 넘어서는 해이며 1945년 광복이후 꼭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가까이는 한·일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지 30년을 넘어서는 해이기도 하다.

그 동안 한·일간에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한국인이 보는 일본관과 일본인이 보는 한국관에는 현격한 차이와 괴리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얼마전에 동아일보와 일본의 유력지인 아사히(朝日)신문에서는 공동으로 “한·일관계 달라질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취재를 한 바 있는데 이 취재의 일환으로 행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다음과 같은 답변들을 한바 있다(동아일보 1994년 1월 14일자 ‘한·일 관계 달라질 것인가’ 기사 참조).

즉 한국인은 일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일제 식민통치’를 가장 먼저 연상하는 사람이 많은데 비하여 일본인은 한국이라는 말을 들을 때 ‘김치’가

생각난다는 사람이 제일 많았다고 한다. 상대방 국가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아시아 국가 9개 중에서 좋아하는 나라를 꼽으라 했을때 일본인은 한국을 싱가포르, 중국에 이어 3위로 꼽았으며 반면에 한국인은 싱가포르, 중국, 태국, 인도 다음의 5위로 일본을 꼽았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가 일본인 혹은 한국인과 결혼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한국인은 21.0%가 “그렇다”, 79.0%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일본인의 경우에는 46.5%가 “그렇다”, 53.4%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서 양국간의 싫어하는 감정을 후세에까지 전이시키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한·일 양국 사람은 상대방의 국민성에 대하여 한국인은 일본인의 장점으로 앞을 내다 볼 줄 알고 현실에 잘 적응한다는 점을 들고 있고, 단점으로는 겉과 속이 다르며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게 대하는 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에 일본인은 한국인의 국민성과 관련하여 장점으로는 끈기가 있으며 예절 바르다는 점을 들고 있고, 약점으로는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적은 한·일 양국민의 성질이나 경향을 꼭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앞으로 한·일 양국간의 문화 및 교육사업을 통한 교류증진의 과정에서 고려할 참고 사항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인 중에는 일본인의 예절비문면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으며 한국인에게는 공격적인 면이 약하고 오히려 주어진 체제나 상황에 순응하는 천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설문답변은 대체로 상대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것이 있다면 한·일 양국 모두 연령층이 젊을수록 상대국에 대한 싫어하는 감정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교육의

힘으로 한·일간의 신뢰성 회복이나 협력의지를 키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반증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일본인에 대해 불신감을 보이고 반일감정을 품고 있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라 할 것이다.

첫째, 일본측의 선공과 야욕으로 시작된 임진왜란을 비롯하여 한반도에 대한 불법침략으로 인한 역사적 상처와 반감을 들 수 있다. 특히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35년간의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경제적 수탈이나 정신대 사건에서 보듯이 인권을 유린한 만행과 무단통치는 우리민족 성원들에게 항상 일본을 경제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행동이나 말에 반감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최근에 있었던 일본 총리의 독도영유권 발언은 가뜰이나 일본에 대해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못하는 한국인에게 불신의 감정을 높여주었다. 더구나 식민통치 이후의 역사적 청산에 대한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의 왜곡된 행동이나 모호한 행위들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과거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사죄로부터 역사적 청산은 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화해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될 수 있음을 일본의 지도자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일본지도층의 이중적 태도로 인해 한국인들은 자존심을 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침략의 주체를 밝히면서 진정한 사죄를 하기는 커녕 ‘과거의 불행했던 양국간 역사’나 혹은 모호한 표현인 ‘통석의 염’ 같은 언어를 외교적 수사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일본의 침략이 한국의 근대화를 앞당겼다는니 혹은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것은 내정간섭 문제라느니 하면서 본질을 호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를 보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를 방문하여 2차 대전에서 희생된 용사들의 묘지에 무릎 꿇고 참회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일본측의 속마음에 대한 우려의 감정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최근 베스트 셀러의 반열에 오르고 있는 일본평전 “추악한 일본인”에서는 일본인의 자만심과 이중심리를 공격하고 일본인에 대한 다른 아시아인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여러 귀절이 눈에 보인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항상 그 이웃 나라들을 일본을 선두로 날고 있는 기러기의 대열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의 대열안에서 하늘을 날 생각은 없다” 등의 말이 그것이다.

셋째, 최근 들어 일본의 정치대국화 현상의 가속화와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일부 일본의 보수 강경 우익 정치인이나 언론의 태도가 군국주의적 향수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얼마전 일본 자민당의 오쿠노(奥野 誠亮) 의원은 일본이 이제껏 아시아와 싸운 사실이 없다는 상식이하의 말을 함으로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로 부터 깊은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산케이 신문(産經)은 보수세력을 대표하여 일본 헌법 제9조의 전쟁포기와 평화수호의지로 충분하지 다시 부전결의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 국회의 부전결의구상은 불필요하고, 유해하며, 독선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역사적 책임이나 교훈이란 것을 모두 무시하는 것인가. 이러한 일본의 보수화 경향을 보면서 한국과 아시아의 국가들은 일본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를 땔 수 없는 것이다(조선일보, 1995년 3월 19일자 기사). 또한 일본 내부의 보수 우경화되는 조짐에 대해 한국의 조선일

보는 “일본은 거꾸로 가나”(1995년 3월 18일자 사설), 한국일보는 “일본 내부의 망동(妄動)”(1995년 3월 18일자 사설)등으로 적절한 지적과 비판을 하고 있다. 사설속에서 일본 내부의 일부 정치적 흐름은 자칫 하면 제2차 세계대전시의 대동아 공영권(大東亞 共榮圈)의 재현만이 될것 같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일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 대한 청산 및 진정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함을 적절히 지적해 주고 있다.

넷째,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즈음한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서 국가의 정치적 차원이나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의식구조를 고려하여 한·일 양국 정부는 그동안 양측 국민의 소원하고 불신감 일변도인 국민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과 평화의 교육사업을 공동으로 적극 논의해 보거나 추진한 일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이 현재의 불편하고 소원한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는 것은 21세기 태평양의 시대에서 국가적 부담이 되고 양국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같은 노력은 국민의의식을 전환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교육적 원리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III. 한·일 양국의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적 과제

1. 21세기 미래사회를 위한 한·일 양국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는 근래에 개발도상국가를 넘어서 경

제선진국의 무대인 OECD의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2020년까지는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로 성장할 것을 기약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1960년대 이래의 경제성장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국가로부터 경이적인 찬사를 받아 온바 있으며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의 선두 주자로서 달려왔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대통령자문위원회인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처럼 세계화추진 1단계인 2000년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규모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하며 1인당 GNP 18,00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생산적인 정치와 정부경쟁력의 제고, 지방자치제의 정착등을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문에서는 창의적인 전문교육,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민족동질성 회복과 시민의식의 세계화를 촉진하여 나가기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담한 잣대 속에서 경제신화를 창조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일본은 오늘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면모를 과시하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 및 군사대국의 길을 걸어가는 목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몇가지 지표를 보아도 일본의 경제적 비중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일본의 세계 1위 경제지표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서울 신문, 1995년 1월 1일자 “1945년~현재의 한·일 국력 비교” 기사 참조). 1993년을 기준으로 볼때 1인당 GDP 33,764 달러, 무역흑자 1,400억 달러, 해외순자산 7,000억 달러, 해외투자 1,540억 달러, 외환보유고 990억 달러, 해외원조 113억 달러, 대외채권 2,410억 달러 등의 수치가 그것이다.

인구면에서 일본이 한국의 3배 정도(1993년현

재 한국의 인구 4405만명 대 일본인구 1억 2,476만명)로 더 많으며 GNP의 크기를 보면 한·일간의 격차는 93년 현재 일본이 4조 2,050억 달러로 한국의 3,287억 달러의 13배 수준에 있다. 1인당 GNP 규모는 93년 현재 일본이 34,100달러로 한국의 7,466달러의 약 4.5배 수준에 있다. 수출규모는 한국이 일본의 4분의1, 수입은 일본의 3분의1 수준에 있다.

제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일본은 세계평화를 위한 전쟁포기선언을 헌법 제9조에서 명문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인은 군대가 아닌 자위대란 이름으로 유사시 타민족과 타국가를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막강한 전력을 소유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일본은 지난 40년 동안 웬만한 나라의 국가예산 보다 많은 막대한 국방비(1994년의 경우 37조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규모)를 매년 쏟아부으며 꾸준히 힘을 축적해왔다. 일본은 탱크와 같은 재래식 무기는 말할것도 없고 이미 걸프전에서 위력을 입증한 최첨단 전자전 무기까지 자체 제작하는 군사대국의 대열에 올라서 있는 상황에 있다(한국일보 1995년 1월 1일자 ‘일본 리포트’기사 참조).

한국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와 잔혹한 무단통치를 경험한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오늘의 군사 대국 일본을 보면서 예전의 악몽을 떠올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일본은 UN의 적국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속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얻기 위한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는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지척의 거리에 있으며 과거 역사를 통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무력침략에 온갖 고통과 시련

을 겪어온 체험이 생생하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깊은 신뢰가 쌓여지고 입증되지 않는한 한국인들은 쉽게 일본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물론 “비가 온 후에 땅이 더욱 굳는다”라는 속담도 있다. 한때의 불행 했던 역사는 미래에의 양국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해 더 이상 걸림돌이 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선발공업국으로서 함께 잘 살아 가는 아시아를 이룩하기 위해 경제발전에 대한 조언과 함께 지원을 해야할 경우가 많을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정치군사적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정책수립이나 아시아 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문제들에 있어 협조체제를 구축해야하는 입장에 있기도 하다. 나아가 지구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보전문제나 핵폐기물의 무분별한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국가간 공동감시체제의 구축, 자원민족주의나 신보호주의 경향에 대한 공동대처, 세계화를 지향하는 민주시민의 육성을 위한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지구적 과제 혹은 한·일 양국의 현안문제를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우선 과거에 대한 반성과 참회의 마음 및 태도를 일본이 보이고 그것을 한국과 아시아제국이 수용한뒤 상호이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과 교류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순서라 할것이다. 과거에 대한 암울한 역사청산과 반성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정신으로 일본이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길 이외에 달리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일간의 화해와 협력 및 이해의 증진

을 위해서는 비정치적인 부문에서 부터 접근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 “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2.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한·일 양국의 교육적 과제

세계화를 지향하는 교육은 세계시민교육으로서, 이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 창의성과 문제 해결능력을 지닌 도덕적 인간상을 육성하는 교육이다.

세계시민으로서 역할과 기능의 육성을 위해 다음 3가지 측면을 교육과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1) 현대사회와 미래사회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예지, (2) 미래사회의 변화를 인간적인 문화 발전과 연결시켜가는 태도, (3) 미래사회의 변화 속도를 감지하고 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 등이 그것이다.

1980년대이후 한·일 양국은 국제화시대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개혁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육성을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변화하는 세계화시대에 적합한 능력과 인성을 갖춘 생산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차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은 생산적인 교육으로 전환시켜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간형의 개발을 중시하고 변화하는 세계와 시대에 적합한 능력과 사고방식의 개발을 추구하는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¹⁾

1) 공보처, 열린세계, 열린미래, -세계화개혁 그 의미와 전략, 1994. 12. pp. 2-17.참조.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이후 과거의 군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양식있는 국민교육”을 1947년 3월 공포된 교육기본법에 의거하여 실시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시민교육은 1980년대 이후 괄목할만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인간교육이란 차원에서 종래의 지식 위주의 교육을 비판하고 주로 사회과를 중심으로 공민적 자질의 기초를 기르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교육과정속에서 말하는 “공민”이란 자유민주 법치국가의 구성원들에게 기대되는 시민적 자질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침에서 교육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정책을 쓰고 있다. 예컨대 대학의 설치기준령을 대폭 완화하여 많은 대학이 등장하도록 함으로써 격심한 경쟁을 하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21세기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이러한 교육계획은 교육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문제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간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공보처, “선진정치 민주 시민교육부터”, 1994. 12. pp. 20-24 참조).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한·일 양국은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고 국가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나 같이 교육개혁을 서두르고 있고 세계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갖춘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IV. 한·일 양국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교육적 대응

1. 이해 및 화해·협력의 출발과 당위성

한·일간의 이해와 화해·협력문제는, 먼저 왜

오늘날 한·일 양국이 화해와 이해 및 협력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거를 제시·설득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순서라 할 것이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비쳐 주는 거울인 동시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의 구실을 한다. 불행한 과거는 용서할 수 있으나 잊지 않는 것이 슬기로운 자의 태도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과거에 안주하여 현실의 중요한 점을 간과해 버리는 것도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다.

한·일 양국간의 화해와 협력의 증진방안은 이러한 기본적 전제에서 살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한·일 양국간의 불행한 과거는 해방 5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 모두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한 바탕에서 21세기 미래사회를 맞는 바람직한 양국관계의 설정이 필요할 때인 것이다. 화해와 협력을 위한 출발은 상대 국가에게 상처를 입힌 국가가 과거 만행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사과의 태도를 보임으로서 시작된다. 역사를 감추고 왜곡하려 한다면, 쓰라린 상처와 아픔을 당한 피해자가 아직도 살아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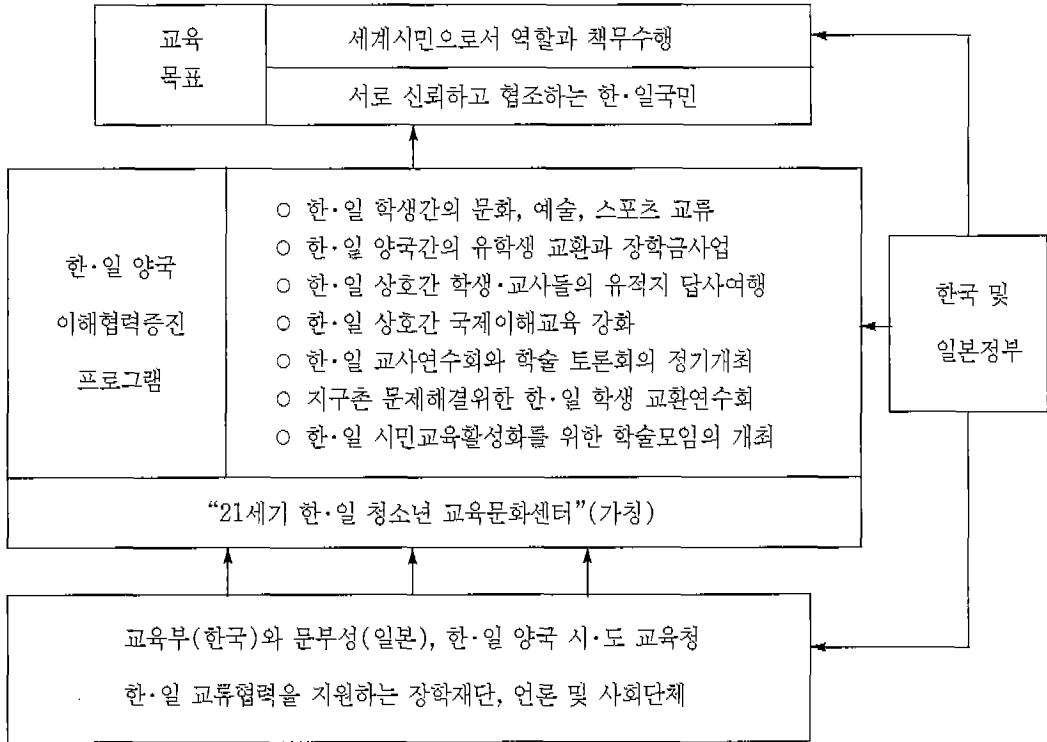
2. 교육차원의 한·일간 이해 협력증진의 모델

한·일간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와 아시아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이해협력 증진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일간의 청소년 교육의 공동 목표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그림 1〉

〈한·일간의 이해 협력증진을 위한 교육모델〉



첫째, 국제화시대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계 시민의 자질육성을 이룬다.

둘째, 한국과 일본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안목을 기르고 현재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이해를 돕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한·일 양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함께 세계 및 양국간의 쟁점에 대한 문제 해결능력을 기르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시킨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면 〈그림 1〉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 처럼 한·일 양국의 신뢰성 회복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협조와 재정적 지원이 요청된다.

특히 양국의 교육문제나 상호 신뢰성 회복프로

그램의 개발 적용, 그리고 양국간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보교환이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21세기 한·일 청소년교육문화 센터”(가칭)의 설립에 관한 구상도 필요하다. 이는 마치 한·일 양국간의 경제 및 무역문제에 관한 학술적 전문가회의인 “한·일 경제인 포럼”이나 경제문제의 조정이나 대화협력 창구로서의 “한·일 신경계 협력기구”의 발족과 같은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다만 그 역할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사업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의 정치적 최고 책임자가 상호 승인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예산 집행 및 활동사업을 추진하는 국제기구로서의 법적 성격을 지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3. 한·일간 화해 협력증진을 위한 교육부문 교류방안

이하에서는 교육모델을 전제로 하여 교육차원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제휴가 가능한 몇가지 방안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1) 한·일 학생간의 문화·예술·스포츠의 교류 사업 활성화

한·일 양국 사이에는 매년 250여만명의 사람과 300억불어치의 물자가 현해탄을 오가고 있다. 이같은 인적 교류와 경제적 교역을 바탕으로 정신적 문화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한·일간의 적대적 감정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한·일간에 문화통신사의 교류가 1992년에 한국측 주관으로 이루어졌고 1994년에는 일본측의 주관으로 실시된 바 있다.²⁾

한·일 학생들은 전쟁을 서로 가하거나 당하지 않은 입장에 있다. 따라서 그들은 기성세보다 이성적으로 자기 조국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의 관계도 상호 신의와 존중속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는 것이다. 학생들끼리의 문화 및 예술 그리고 스포츠의 교류와 교환경기는 상호 불신의 벽을 허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일간의 고교 야구경기 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스포츠 전종목으로의 교환경기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WTO 체제가 출발하는 이즈음에는 국가간 예술과 문화행사가 상호교류되어 활발하게 공연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돕고 한국과 일본간의 상이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해 주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 한·일 양국간의 유학생 교환과 장학금 사업의 확충

한·일 양국간의 유학생 교류사업은 주로 대학생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보다는 미국중심으로 유학을 떠나는 일이 많다. 물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중심의 유학 장려가 계속 증대되어야 할 것이지만 단기연수과정으로서 중·고생의 상호교환유학도 한·일 문화를 이해시키고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운용이 되면 일본과의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자매결연을 맺어 유학생 교환 사업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도 될 것으로 본다.

일본어는 한국에서도 주요한 외국어의 하나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많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정부는 각급 학교에서의 일본어 담당 교사에 대한 정기적 연수뿐만 아니라 일본어 관련 어학테스트대회나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입상자들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주고 현지 연수기회를 마련해 주어 일본의 참다운 모습을 이해시키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의 추진에는 한국민의 일본에 대한 정서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최근 김영삼-하시모토간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현재의 연간 4,500명 수준에서 2000년에는 1만명 선까지 청소년 교류인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합의는 매우 뜻깊은 것이라 할수 있다(동아일보,

2) (제대한민국 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세소식”, 제 279호, 1994. 12. 9일자 참조).

1996년 6월 24일자 기사 참조).

(3) 한·일 상호간 학생·교사들의 상대국 유적지 답사 권장

조선일보사에서 매년 주관하여 실시하는 학생 및 역사교사들 중심의 “일본속의 한민족사 탐방과 유적지답사여행”은 학교현장에서는 매우 큰 호응과 관심을 얻고 있으며 일본을 돌아 온 이후 진지한 역사수업과 살아있는 역사의식을 느껴보는 일이 많다고 한다.

한·일간의 불신과 적대적이기까지 한 감정의 해소는 상대방의 역사적 유물이 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합작품이란 것을 알 때 이질성보다는 동질성 확인에 더 애착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학생과 교사들의 상대국으로의 유적지 및 역사기행은 특히 한국으로부터 문화적 혜택과 전수를 주로 받은 일본측이 한국으로의 여행을 많이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교육부 및 문화공보처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의 인식의 전환과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며 일본정부 및 교육·사회단체의 새로운 발상전환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일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역사공동연구회”를 발족시켜 한·일간의 역사연구를 통한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가기로 하였는데, 이는 장차의 한·일관계를 역사적으로 체계적인 이해를 할수 있다는 점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것이라 할수 있다(동아일보, 1996년 6월24일자 기사 참조).

(4) 한·일 상호간의 국제이해 교육의 강화

한·일 양국민은 상대방 국민에 대해 불신·증오

·멸시·무시 등의 감정이 매우 강하다. 이것은 전쟁과 침략의 주체인 일본측의 역사적 청산이 미흡하며 그나마 오늘날 일본 강경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나 일부 언론의 보수적인 보도태도를 이따금씩 접하면서 아직도 반성을 진정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본과 한국인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경우에 따라 동경과 애정을 보이기까지 한다—상대방을 애써 무시하고 증오하는 이중의 굴절의식으로서 애증증후군(愛憎症候群)(Love-hate syndrome)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권오정, 1986, pp. 144-146).

이러한 한·일 양국민의 왜곡된 의식이 상존한 상태에서 예컨대 1982년에 있었던 일본측의 역사교과서 왜곡과동같은 것은 한·일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 오히려 이같은 일본측의 행태는 한국인으로 하여금 호주머니를 털어 거국적으로 일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독립기념관을 세우는 제기를 만들어 준바 있다(이원순, 1995. 2., pp.2-3).

한·일 국교 정상화란 것은 단순히 30년 세월의 흐름이 축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양국간의 관계도 이제 성숙한 수준으로 정립되어져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한·일 양국민 개개인이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객관적으로 상대의 실체를 인식하며 상호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의논하여 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대방국가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긍정적인 정보와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서로간의 국익을 위해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세계시민의 자질을 형성해갈 수 있는 국제이해교육의 강화와 활성화가 요청되는 것이다.

다만 1970년대 이후 신보호주의 경향의 대두와 함께 교육부문에서도 보수화의 경향이 나타나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이 민족주의적 색채를 짙게 나타내 가고 있는 것은 한·일간의 문화이해 교육차원에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일이다. 한·일간의 이해와 화해협력을 위해서는 특히 사회과 교육을 통해서 민족주의의 *Nationalism*와 국제주의의 *Internationalism*의 시각을 조화있게 배려해 나가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일본측이 1992년부터 1994년에 걸쳐 새 ‘학습지도요령’에 의거 일본인으로서의 나라사랑, 국기 및 국가존중교육, 민족의 전통과 문화계승을 상대적으로 그 이전보다 강조하여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취시켜 가려는 움직임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정세구, 1994. 10, pp. 30-31; 김영일, 1994. 10, p. 42).

(5) 한·일 교사연수회와 정기적 교육문제 토론회의 개최

일본 문부성 초청의 장기연수를 위한 교사선발이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교사들을 해외 첨단학문 및 기술분야에의 긴밀한 접촉을 권장함으로써 교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한국인교사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아주 뜻깊은 한·일간의 이해 협력증진 프로그램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한 이해와 일정한 식견을 가진 교사는 분명 감정적으로 한·일 양국의 어느 한편에서 타방을 무시하고 경멸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태도는 교실 수업에서도 곧바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제 경제적 풍요를 기반으로 빛나는 한민족 문화의 정수를 해외에 소개하고 홍보하며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다른 나라의 교사들

을 우리나라로 불러 들어 우리역사를 소개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도록 하는 국가적 정책을 세울 때가 되었다고 본다.

한·일간의 교육문제와 관심사를 둘러싼 토론회의 개최와 공동의 해결방안의 모색과 시사점의 추구도 뜻깊은 교육사업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예컨대 동양유학사상 토론회나 한·일간의 교육자치제의 비교,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전문학자들의 심포지움개최, 혹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문제나 교사와 학생의 교육권논쟁 같은 것이 논의될 수 있다. 심지어 청소년비행이나 범죄문제를 비롯한 학교내의 폭력사태나 흡연 혹은 약물남용문제, 성인비디오 시청이나 불건전한 성문제 등에 대한 공동의 문제분석과 대책의 추구등은 장차 한·일 양국의 2세 교육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

(6) 지구촌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학생 교환 연수회 활성화

한국과 일본은 단순히 양국간의 묵은 감정이나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서 끝날 것이 아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국제화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국경을 넘어서 상품과 정보 및 과학기술의 성과가 범람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 무시되고 정치적 자유가 억압되는 곳도 있으며 핵폐기물의 무질서한 방기(얼마 전에 러시아의 핵폐기물이 동해바다에 버려진 일이 있다)와 환경오염문제, 그리고 생태계의 보전문제, 남극권 개발문제, 빈곤과 자원부족의 문제 등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한·일 청소년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격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일간의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청소년단체의 교류라든지 보이스카웃과 걸스카웃 활동의 상호교류, 우주소년단의 국제적 협력방안모색, 청소년적십자운동의 한·일간 협력사업 추진과 연수회 개최등은 한·일간의 장차 2세들에게 협조와 사랑만이 두나라 모두가 살길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시켜주는 교육이 될것이다. 예컨대, 최근 어느 한국의 고교생이 일본에 9박 10일 여정으로 청소년적십자 한·일 청소년교류를 마치고 와서 쓴 기행문은 다음에서 보는 바 처럼 젊은 학생들은 서로 순수하고 이상에 불타기 때문에 서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길 희망한다는 진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은 나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었다. 지난 7월 29일에서 8월 7일 까지 9박 10일동안 원폭이라는 가슴 아픈 참상을 간직하고 있는 평화의 도시 히로시마(廣島)에서 청소년 적십자 단원으로 국제교류를 가졌기 때문이다. ...히로시마현 Kure 시에 있는 吳三津田 高等學校를 방문했다. ...점심 식사후 간단한 오락 시간을 가졌다. 노래도 부르고 게임을 가졌다. 우리나라의 ‘아리랑’을 가르쳐주니 일본 학생은 ‘사쿠라’라는 노래를 가르쳐주었다. 오락이 끝난후 배구시합을 하였다. 여학생들도 아주 잘했는데 배구는 일본에서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한다. 헤어질 때는 서로가 아쉬웠는데 지금도 그 친구들이 잊혀지지 않는다. ...오전에는 시내로 직접 피켓과 팸플렛을 들고 현혈 계몽활동을 나갔다. 일본의 청소년적십자 단원과 함께 했는데 사람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다. ...밤에는 Danaka 친구들과 공원에서 폭죽놀이를 하였고 Hinoue 에게서 일본노래를 배우고 나도 그에게 ‘사랑으로’를 가르쳐 주었다. ...오후에는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등의

여러 나라 학생들과 평화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무척 유익했고 많은 친구를 사귄수 있어 좋았다...” (대전소재 남대전고등학교 교지 “대운” 1992년호, pp. 83-88)

(7) 한·일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당위 및 관련 학회 모임 개최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국가로서 각기 자국민을 민주적 소양을 지닌 시민으로 육성해 나갈 책임이 있다. 민주시민이란 개인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인간이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 및 국가의 현안 문제에 대해 상대방과 합리적인 가치관과 도덕규범을 기반으로 서로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시민교육이 한·일 양국에서 적절히 이루어지고 한·일간의 현안 문제나 쟁점에 대한 처리도 시민교육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면 긴장과 갈등을 낳는 불신감은 극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일 양국은 속마음을 터 놓고 두나라의 장래와 아시아의 민주화 및 평화를 위해 진지한 시민교육차원에서의 협의와 탐구를 공동으로 해본 일이 거의 없이 서로 혈뜯고 비방하기에 급급한 면이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교육당국자나 혹은 시민교육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양국의 시민교육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과 대안 모색을 할 수 있는 정기적인 학술모임이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양국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내용이 심의되고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면 한·일 양국민의 적

대적 감정을 초래했던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파동은 사전에 해결되거나 그 부정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지난 1995년은 세계자유무역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규제해 나가는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한 해였다. 또 올해는 2002년 세계인의 평화적 제전인 월드컵축구대회가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으로 개최되는 것을 결정한 해이다. 이제 우리는 한·일간의 축적된 무역관계나 정치군사적 상호의존관계, 나아가 스포츠교류등을 보더라도 지나간 한·일간의 어두웠던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여야 할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고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이끌어 나갈 동반자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시점에 있으므로 과거의 가슴 아픈 상처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도약대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일 양국은 21세기를 짊어지고 나갈 제2세 교육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함께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 불신감과 상처를 더 이상 미래의 주인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을 성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옹호자로 인식해야 하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국력도 예전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는 극도의 경각심과 패배주의의 표출은 문제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책이 아니라 여겨진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의 양식을 믿고 장기적 차원의 한·일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개발 적용하여 불신감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일본에도 “사랑은 사랑을 낳고 믿음은 믿음을 낳는다(愛は愛を生み, 信は信を生む)”라는 좋은 속담이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대한 좋은 신뢰구축과정에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방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간의 화해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이정표 설정과 교육차원의 협력증진이 제대로 이루어질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최고지도자의 상호 승인하에 “21세기 한·일 청소년 교육문화센터”(가칭)의 설치를 위한 법적 장치마련과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21세기 한·일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는 한·일 청소년들의 상호신뢰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평가하여 양국의 정치적 최고 실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셋째, “21세기 한·일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는 한·일 양국의 교육 및 청소년문제 전문가로 구성하며 양 정부의 교육부(혹은 문부성)와 지방교육자치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한·일간의 교사 및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협력사업(예컨대 앞장의 여러가지 교육프로그램 참조)은 세계시민의 육성과 함께 한·일 양국간의 신뢰성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자 및 학생 교류사업과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들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단체는 장려한다.

참 고 문 헌

- 권오정, 국제화 시대의 인간형성, 배영사 신서 143, 1986
- 김영일, “외국 초중등 학교의 민족교육 동향”, 교육월보 1994년 10월호, 교육부
- 대통령비서실, 김영삼 대통령연설문집(제 2권), 공보처, 1995.2.
- 배성동, “일본의 정치개혁과 국가발전의 위상”, 국책연구 1991년 가을호, 민주자유당 부설 국책연구원.
- 이도형, “한·일군사안보 협력”, 한국논단 1994년 5월호 pp.21-25.
- 이원순, “일본교과서가 독립기념관을 세우게 했다.”, 독립기념관, 1995년 2월.
- 일해연구소, 여기 한국인의 숨결이, 일해연구소, 1988년.
- 재 대한민국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의 새소식 제279호. 1994년 12. 10.
- 전여옥, 일본은 없다, 지식공작소, 1994.
- 정세구, “세계화시대의 민족교육”, 교육월보 1994년 10월호, 교육부
- 최현섭, “한·일 우호관계 확립의 전망과 교육적 과제”, 사회와 교육 제16집. 서울:한국사회교육학회, 1992.
- 프리드맨, 추악한 일본인(김순호 옮김), 서울:이문, 1995.
- 한국교육개발원, 한·일 양국간의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교과서 국제비교연구실.1985.
-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한·미 국제 학술회의, 1994.8월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한국과 일본의 사회과교육”, 한·일 사회과교육 심포지움자료, 1991.3.